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87호  
2016. 11. 28

## 정책동향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과제

## 시장동향

■ 9월 건설 기성,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 10월 가계 신용, 1,300조원 넘어서

## 산업정보

■ 美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 추진 정책과 국내 파급 효과

■ 미국 노동 시장의 최근 동향 분석

## 건설논단

■ 트럼프 대선 공약, 기대감의 허와 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과제

-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춘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 병행 필요 -

### ■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과 한계

-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SOC 자본 축적에 기여한 건설 분야의 대표적 창조경제 산업임.
  - 그간 시공을 지원하는 분야로서 중요성이 저평가되었으나 부가가치율(65.3%), 고용유발(14명 고용/10억원) 등이 제조업의 3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임.
- 그러나 최근 공공 SOC 투자 감소<sup>1)</sup> 등의 영향으로 정체 상태이고, 저가 수주, 낮은 대가로 인한 기업의 영세화 지속 및 자본 조달 능력 부족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은 3,196개사<sup>2)</sup>로 중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업 기준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수주한 대형 기업은 25개사(전체의 1.1%)에 불과함.
  - 이는 사업 대가의 경우 법정요율 대비 실제 지급액이 낮은 수준<sup>3)</sup>이고, 업체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등 이중고(二重苦)로 인해 기업의 영세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임.
- 이러한 산업 경쟁력 취약 원인에는 시장 축소 등의 외부 환경 요인 외에도 법·제도의 후진성, 시공 중심의 산업 육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표 1> 참조).

<표 1>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취약 원인

경쟁력 취약 원인	내 용
· 정부에 종속된 국내 시장	· 국제적인 기술기준과 입찰제도에 대한 적응력 부족
· 세분화된 칸막이 규제 제도	· EC, PM/CM 등 종합사업능력을 갖춘 대형 업체 부재
· 우수인력 유인 곤란	· 전직 공무원 우대, 고령화, 특급기술자 과다, 저가인력 중심 시장 구조
· 기술력 부족	· 영업력 우선, 기술력 뒷전 풍토 만연 → 업체 간 기술력 하향 평준화
· 해외 진출 역량 부족	· 해외 진출 전략 부재, 해외사업 인력 경험 부족, 관련 시스템 취약 등

1)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가 SOC 예산을 매년 6.8%씩 감축할 계획임.

2)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5,559개사이며, 이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3,196개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수는 2,040개사임.

3) 정동영 의원(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설계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대비 실제 지급은 56.8% 수준이며, 감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적정 감리대가 대비 56.3% 수준임.

## 정부의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집중 육성 계획

- 최근 정부는 잇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표 2> 참조).
-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적극적 육성책 발표는 그동안 시공 대비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 있어 긍정적임.
- 특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대가 현실화 등 ‘한국만의 낮은 제도’의 정비를 통한 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전략은 시급성 및 필요성에 있어 매우 합리적 정책으로 판단됨.

<표 2>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관련 주요 정책

구 분	주요 내용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 (2016.10.12.)	· 해외 진출 기반 구축	· 용역대가 산정 기준 개선(실비정액가산방식 조기 정착) · 주요 진출국 핵심 정보 제공 · 해외건설 수주 신고 간소화
	· 국내 제도의 글로벌화	· 국제 기준에 따른 시범 사업 시행(종합심사낙찰제) · 기술경쟁력 위주의 공정개발 원조사업 평가 ·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술 역량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기술사 배출 확대
제16차 경제관계 장관회의 (2016.10.19.)	· 기본설계, PM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진출	· 설계 실습용 플랜트 교육 도입, 글로벌 교육 도입 및 인턴 파견 · 설계 R&D 확대 및 실증화 연계 · 해외 M&A 및 투자 유치 지원 · 국제 공인 PM 교육 도입, 국제 공인 PM 인증 도입 및 트랙 레코드 구축 · 유지·보수(O&M) 진출 활성화
	· 제도 개선 및 성장 기반 구축	· 기술력 중심의 사업자 선정(기술 배점 상향,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사업대가 기준 선진화, 중소기업 부담 규제 완화(학경력자 인정 등) · 엔지니어링 해외 진출 지원 강화(보증보험 강화 등) · SOC 분야 BIM 적용 확대

##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야

- 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에 종속된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해 해외 영업 전략의 다변화, 이종(異種) 산업간 연계를 통한 고객 수요 기반의 역량 확보·서비스 다변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조직·경영 환경 재정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정부 또한 산업 육성책의 안정적 추진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위한 세분화된 칸막이 규제 해소, 실적 정보 체계화 등도 추가 정책 과제로 고려해야 함.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 9월 건설 기성,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

- 공공 8.1% 감소·민간 20.9% 증가, 건설 기성은 순환변동치상 호황 국면 -

### 9월 건설 기성, 민간의 호조세로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하여 14개월 연속 증가

- 2016년 9월 건설 기성은 공공이 부진한 가운데 민간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한 10조 152억원을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표 1> 참조).
  - 이는 지난 2002년 10월~2004년 11월(26개월) 이후 가장 긴 증가세임.
  - 다만 지난 5~8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 +20%p 이상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9월에는 11.5%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감소하였음.
- 발주자별로 공공이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하였으며, 민간은 20.9% 증가함.
  - 공공 발주 기성은 8.1% 감소해 지난 8월 5.9% 증가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함.
  - 민간 발주 기성은 20.9% 증가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공종별로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 토목은 4.7% 감소

- 공종별로 토목 공사 기성은 전년 동월비 4.7% 감소했으나, 건축 공사 기성이 20.2% 증가함.
  - 건축 공사 중 주거용이 24.3% 증가해 17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비주거용 건축도 13.8% 증가해 11개월 연속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사 중 플랜트는 25.1% 증가해 양호했으나, 일반토목과 전기기계가 각각 9.5%, 42.2% 감소해 부진했음.

<표 1> 2016년 9월 건설 기성

구분	총액	공종별							발주 기관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공공기관	민간기관
			주거용	비주거용		일반토목	전기기계	플랜트		
2016. 9월	10,015.2	7,034.1	4,416.7	2,617.4	2,981.1	1,682.1	240.5	984.2	2,467.5	7,090.0
증감률	11.5	20.2	24.3	13.8	-4.7	-9.5	-42.2	25.1	-8.1	20.9
2016.1~9월	83,749.7	57,293.3	36,264.8	21,028.5	26,456.4	14,578.6	2,911.5	8,494.9	21,888.7	58,014.1
증감률	17.7	24.7	30.9	15.4	4.9	-0.7	-17.1	28.4	-0.3	24.8

주 : 발주 기관별에서 민간투자자와 외국 기관은 생략되어 있음.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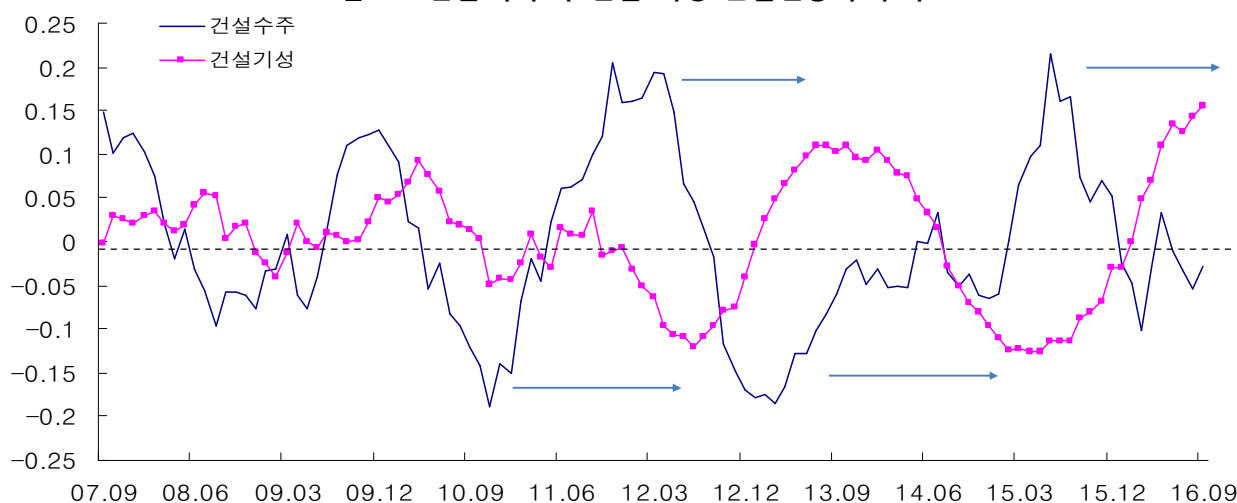
## ■ 순환변동치상 최근 건설 기성은 호황 국면 시현

- 최근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 순환변동치를 살펴보면, 건설 기성이 호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됨(<그림 1> 참조).
-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지난해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매우 양호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 동행 지표인 건설 기성이 올해 상반기 호황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됨.

## ■ 건설 기성은 3/4~4/4분기 내 정점, 이후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한편, 건설 수주의 순환변동치가 올해 상반기 이후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향후 건설 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주가 5~6월 2개월 감소하고 다시 7~8월에 증가하는 등 뚜렷한 하강 기조를 보이지 않아, 수주 감소 영향은 좀 더 시차를 두고 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올 상반기 순환변동치상 빠른 속도로 호황기에 들어선 건설 기성은, 3/4분기 또는 4/4분기 사이에 정점을 찍고 점차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수주의 순환변동치가 작년 2/4분기 정점을 기록하였는데, 수주와 기성 간 순환주기 시차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올 3~4/4분기 사이에 건설 기성의 순환변동치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이후 건설 기성의 순환변동치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1>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 순환변동치 추이



주 : 통계청이 제공한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로그화하여 HP 필터링 수행, 7개월 이동 평균, 기성은 변동 폭을 2.5배 확대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10월 가계 신용, 1,300조원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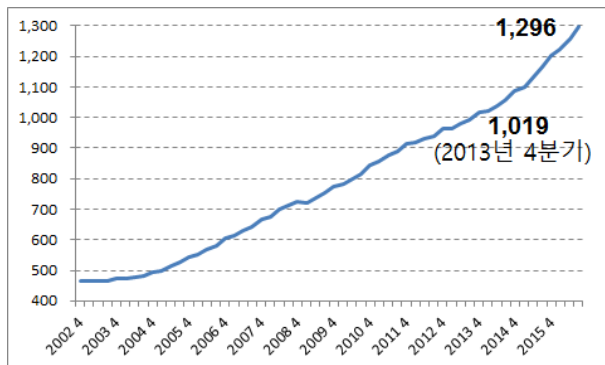
-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 사업장의 '잔금 대출'은 분할 상환해야 -

## 3/4분기 가계 신용 중 주택 담보대출 증가세 지속

- 2016년 3/4분기 가계 신용은 1,295조 8,000억원이나, 10월 중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을 고려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 신용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됨(<그림 1> 참조).
- 2016년 3/4분기 가계 신용은 1,295조 8,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8조 2,000억원(3.0%) 증가함. 그러나 10월 중 은행권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이 7조 5,000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10월을 기준으로 가계 신용이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2013년 4분기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근 3년 만에 1,300조원을 상회하게 됨.

<그림 1> 가계 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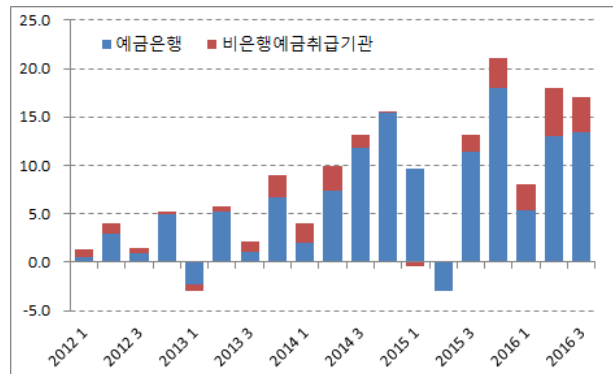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예금 취급 기관 주택 담보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와 같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도 지속됨.
- 3/4분기 가계 대출은 전기 대비 36조 2,000억원(3.0%), 판매 신용은 1조 9,000억원(2.9%) 증가함.
- 예금 은행 17조 2,000억원(2.9%),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11조 1,000억원(4.2%), 기타 기관 7조 9,000억원(2.3%) 증가함.
- 예금 취급 기관의 주택 담보대출은 전기 대비 17조 1,000억원(3.2%) 증가하며 주택 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예금 은행은 13조 4,000억원(3.2%),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3조 7,000억원(3.4%) 증가함.

##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 가계 신용 발표 하루 전인 11월 24일, 정부는 8.25 「가계 부채 관리 방안」 후속 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함.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임.

- 금융감독원 속보치에 따르면 1~10월까지의 집단 대출이 17조 9,000억원 증가함. 2014년과 2015년 연간 증가액은 각각 9,000억원, 8조 7,000억원 수준임. 올해 1~10월까지 증가액이 전년 증가액의 2배에 이르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견인함.
-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가산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택 담보대출은 고정 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고정 금리 : (9월말)2.74~4.70% → (11.22일)3.3~4.8%, 변동 금리 : (9월말)2.57~4.35% → (11.22일)2.8~4.5%

-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 되는 사업장의 '잔금 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 적용 기관은 은행·보험 업권(業圈)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상호금융권 및 새마을금고는 업권내에서 자율적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면 소득 증빙 자료의 객관성 확보, 비거치·분할 상황, 금리 상승을 감안한 상환 능력 평가(stress DTI), DSR(Debt Service Ratio) 지표 활용 등이 해당됨.
-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사업장은 고정 금리·분할 상황을 유도하는 전용 '보금자리론'을 2017년에서 2018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2017년 1월부터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차주 특성 등에 적합한 맞춤형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농어민에 맞는 소득 증빙 방식을 마련하고 만기가 짧고(3~5년)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을 감안하여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DSR(Debt Service Ratio)을 연내 도입하고,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계획임.
  - 우선적으로는 참고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나, 가계 부채 증가 추이, 금융권 활용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율 규제 전환도 검토할 계획임.
- 금변 대책은 내년 분양 사업장의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공급자들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분양을 연내로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잔금의 원금 상환이 의무화되면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의 수요 위축은 불가피함. 이에 따라 금변 대책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 美 대통령 당선인의 우선 추진 정책과 국내 파급 효과

-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

### ■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자, 100일 간의 우선 실행 정책 목표 발표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1월 21일 'Transition 2017' 홈페이지에 'A Message from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라는 동영상상을 통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우선적으로 실행할 정책 목표를 발표함.<sup>1)</sup>
-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 활성화와 법질서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함.
- 우선 추진 정책들은 취임 후 국회의 동의 없이도 행정조치(executive actions)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대부분임. 따라서 향후 트럼프가 추진할 정책이 본 목록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표 1> 참조).
  - 특히, 대선운동 기간 중 가장 강조한 2개의 핵심 재정 정책인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은 우선 추진 순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표 1> 우선 추진 정책 및 기타 대선 공약

취임 후 100일 간 우선 추진 정책	기타 대선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탈퇴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재협상</li> <li>• 셰일가스와 청정석탄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산업 규제 철폐</li> <li>• 1규제 신설 시 2규제 철폐</li> <li>• 자국 인프라 보호를 위한 안보 조치(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포함)</li> <li>•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노동자의 비자 악용 방지</li> <li>• 공직 퇴임 후 5년 간 로비스트 활동 금지 (외국 정부를 돕는 행위는 평생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li> <li>• 세율 인하</li> <li>• 수입 관세 부과(예, 중국 45%, 멕시코 35%)</li> <li>• 오바마케어 폐지</li> <li>• 불법 이민자 퇴출</li> <li>• 멕시코 장벽 건설</li> <li>•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방위비 추가 부담 요구</li> <li>• IS에 대한 대응</li> <li>• 이란 및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안보 정책</li> </ul>

1) [https://www.youtube.com/watch?v=7xX\\_KaStFT8&feature=share](https://www.youtube.com/watch?v=7xX_KaStFT8&feature=share).



## ■ 취임 후 100일 간 우선 추진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및 금리에 미칠 영향

- TPP 탈퇴 및 양자 간 무역 협정 재협상으로 표현되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은 한·미 간 FTA의 재협상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환율 조작국 지정 및 관세 부과 등 구체적인 보호무역 정책들이 수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및 우회 수출도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내 가계 부문의 실질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산업 규제 철폐 등 트럼프의 미국 내 경기부양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임.
  - 제닛 옐런 미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1월 17일에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비교적 빨리 (relatively soon)’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함.
  -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은 기존보다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국내 건설산업 및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 가져올 듯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무역 및 실질가처분소득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소유비용 증가,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 감소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경기 활성화 및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대미 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관세 등에 의하여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기업규제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 예정보다 금리를 더 빠르게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령화, 인구 감소, 주택 공급 확대 등과 맞물려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이 민간 건설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건설시장에 미칠 파장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박수진(연구위원 · ji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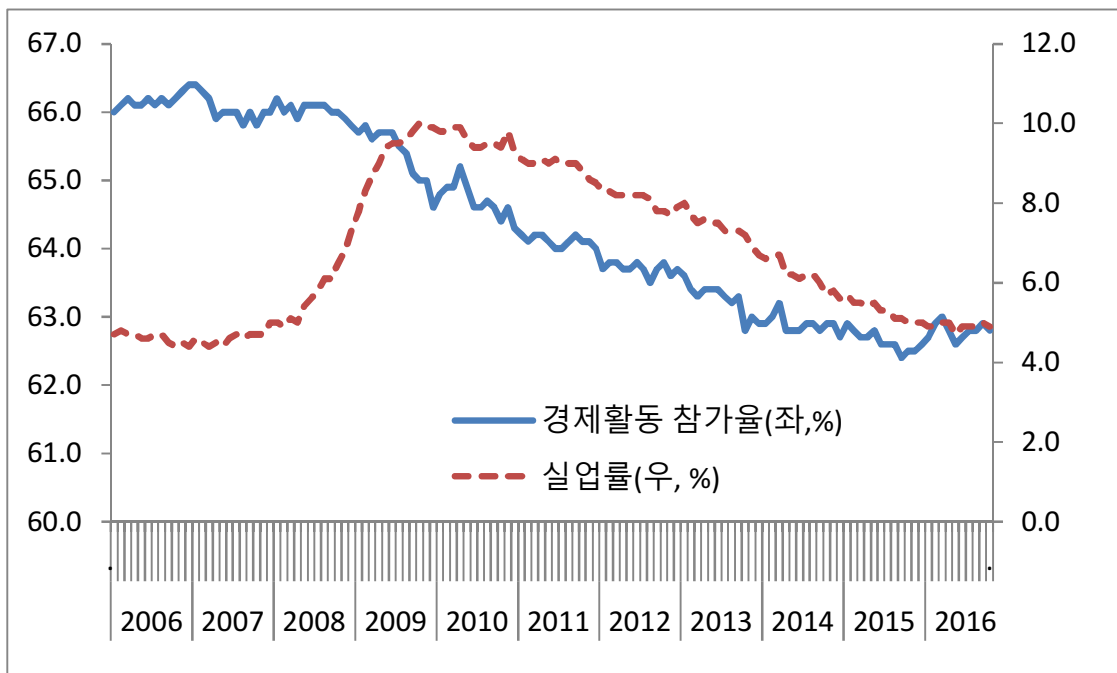
## 미국 노동 시장의 최근 동향 분석

- 최근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전환과 함께 실질 임금 상승 기조 확인 -

### 점점 뚜렷해지는 미국의 고용 개선 기조

- 2006년 이후 미국 고용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2009년 10월에 10%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해 왔고, 2016년 10월에는 4.9%를 기록함(<그림 1> 참조).
- 완전고용 수준에 이른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었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9월에 최저점인 62.4%를 기록한 후 상승 국면으로 진입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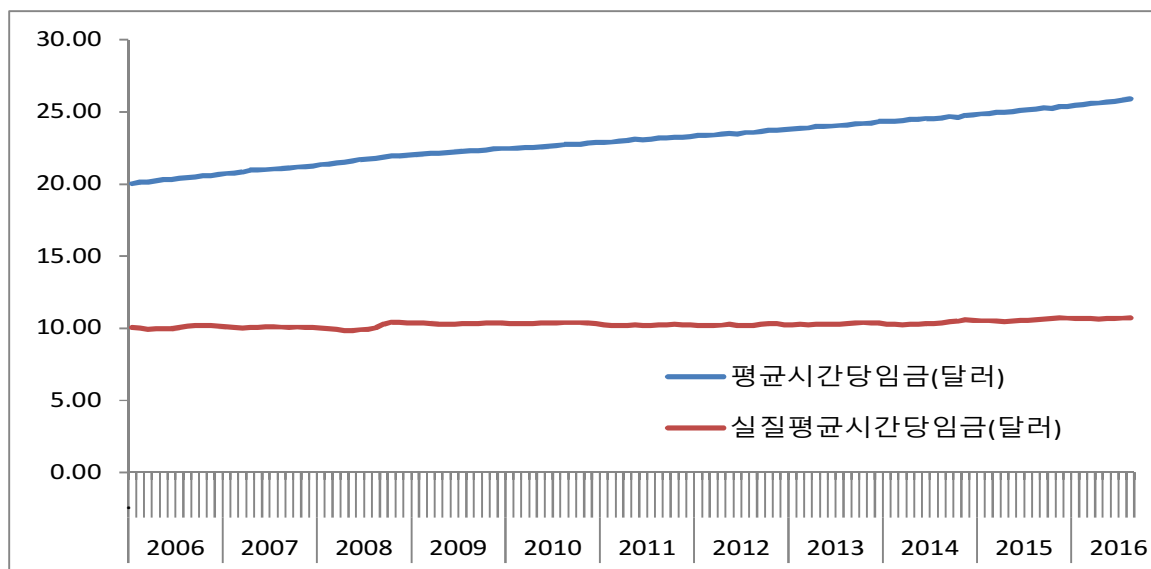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실업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자료 :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 5%를 하회하는, 완전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과 상승 기조로 전환한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되어 임금의 상승 압력이 축적되고 있음.
- 민간 부문 모든 피고용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했음. 특히 2016년 10월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0.4%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은 전월 대비 0.1% 증가함(<그림 2> 참조).

&lt;그림 2&gt; 미국 시간당 임금 및 실질 임금 추이



자료: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 ■ 노동 시장 향후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 여부의 키(key)

-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대책의 중심을 중앙은행인 미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거시 경제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경제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은 ① 낙관적 시나리오와 ② 비관적 시나리오로 구분 가능한 데, 노동 시장의 향후 전개가 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 시장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시장 복귀가 지속되면, 확대 재정 정책의 결과로 총수요가 증가해 고용이 증대하더라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증가와 함께 잠재 성장률이 상승해 저물가, 저금리, 저임금 하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음.
  -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확대 재정 정책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 증가는 수반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함. 이는 재정 적자 심화로 금리 상승은 가속화되고 미국과 세계경제가 모두 경기 침체 상태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노동 시장 동향은 실질 임금의 상승 기조를 감안할 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물가 상승률이 미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할 경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현재 결원 상태로 있는 2명의 이사를 임명함으로써 미연준 이사회가 물가 안정 등 중앙은행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게 되면 금리는 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 트럼프 대선 공약, 기대감의 허와 실

도널드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었다. 최근 여러 매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트럼프 당선의 영향과 공약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건설 부문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공약은 크게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 정책이 되겠다.

우선, 에너지 정책에 있어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화석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린 빌딩, 항만, 공항, 도로 등에서의 선두주자이며, 자국의 그린 건설 붐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나라다. 미국의 상업용 건설시장의 강자인 터너사(2015년 기준 미 400대 건설 기업 중 3위 기업)의 경우 매출의 과반을 그린 빌딩에서 올리고 있다. 이미 그린 정책과 맞물려 건설기업과 연관 산업이 그린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린산업의 성장과 배치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린 건설시장은 선진국에서의 주요 수출 상품이 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무효화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린 에너지 정책의 전반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화석 에너지 정책은 자국의 원유 생산(채굴)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투자 여력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출에 있어서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중동의 투자 여력은 2014

년 이후로 계속 악화된 상태로 실제로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건설 수출의 지역, 상품, 수행 방식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10년 간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재정 투자를 주장한 힐러리와 달리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건설 수출의 호기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경험 부재, 장비, 자재, 노무 등의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 진출 방식은 성공하기 어렵다. 심지어 미국은 도량형도 다른 나라이다. 유럽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기업 M&A를 통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은 우리 건설업계에서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일 경우 투자회사로 참여하여 경험을 습득한 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도 M&A를 통해 현지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및 운영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노후 인프라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최석인(기술정책연구실장 · sichoi@cerik.re.kr)